

국제법

문 1. 성립 당시 그 자체로서 국제법 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(은) 문서는?

- ① UN 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를 결정(the decision)한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
- ②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
- ③ 1992년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(Rio Declaration)
- ④ 1948년 세계인권선언

문 2. 1969년 조약법에 대한 비엔나 협약 상 조약의 종료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약의 이행불능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약이 종료될 수 있다.
- ② 당사국 간의 무력충돌이나 적대행위의 발발(勃發)로 조약은 당연히 종료한다.
- ③ 조약의 중대한 위반은 조약의 종료사유이다.
- ④ 조약 당사국 간의 외교 또는 영사관계의 단절로 그 조약이 당연히 종료되지 않는다.

문 3. 국제무역기구(WTO)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각 절차 단계별 시한(時限)의 설정
- ② 패널설치,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채택에 역(逆)컨센서스 제도의 도입
- ③ 상설의 상소기구(Appellate Body) 도입
- ④ 교차보복(cross-retaliation)조치의 불허용

문 4.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절차사항(procedural matters)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② 해당 사항이 절차사항(procedural matters)이 아니면 그 외의 모든 사항(all other matters)인지를 결정하는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③ 국제사법법원(ICJ) 판사의 선출을 위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④ 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문 5. 국제사법법원(ICJ) 규정 제38조가 규정하는 재판의 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‘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주체의 일관되게 반복되는 행위로 형성되는 일반관행과 법적 확신(opinio juris)을 갖추어야 한다.
- ② ‘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’은 국내법의 원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제법의 원칙도 포함된다는 입장도 있다.
- ③ ICJ는 직권으로 ‘형평과 선(ex aequo et bono)’을 재판준칙으로 사용할 수 없다.
- ④ 국내법원의 사법판결(judicial decisions)은 ICJ의 재판준칙으로 사용될 수 없다.

문 6. 국가승인에 대한 국제실행(practice)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1965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인종차별적 소수 백인 국가인 로디지아를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.
- ㄴ. ‘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몬테비디오 협약’은 “국가는 다른 국가의 승인과 상관없이 존재한다.”라고 규정하여 ‘선언적 효과설’에 입각하고 있다.
- ㄷ. 미국에 의해서 승인된 피승인국은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.

- | | |
|--------|-----------|
| ① ㄱ, ㄴ | ② ㄱ, ㄷ |
| ③ ㄴ, ㄷ | ④ ㄱ, ㄴ, ㄷ |

문 7. 국제사법법원(ICJ) 규정 제36조 2항(선택조항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ICJ 규정 회원국은 선택조항을 수락함으로써 ICJ의 일반적 강제관할권을 받아들일 수 있다.
- ② 선택조항은 조약의 해석, 국제법의 문제, 성립하는 경우 국제 의무위반을 구성하는 사실의 존재,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나 범위에 대하여 적용된다.
- ③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ICJ의 강제적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.
- ④ 상설국제사법법원(PCIJ)의 강제관할권 수락의 효력이 지속되는(still in force) 경우 별도의 선언 없이 ICJ의 선택조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.

문 8.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어느 국가 및 그 재산이 다른 국가의 재판 및 강제집행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.
- ② UN 국가면제협약 상 면제에서 제외되는 상업적 거래란 국가가 외국의 사인과 거래관계를 맺은 경우로서 그 거래에 대한 분쟁이 타국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이다.
- ③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된 사람이 면제를 주장하는 국가의 공공업무(governmental authority)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면제가 인정된다.
- ④ 국가가 면제를 포기하고 외국법원의 소송에 응소한 경우 집행권으로부터의 면제도 포기한 것으로 본다.

문 9. 범죄인인도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정치범 불인도 원칙은 국제형사법원(ICC)의 범죄인인도에도 적용된다.
- ② 범죄인은 범죄행위지에서 처벌하는 것이 침해 법익(法益)과 증거수집의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하나 자국민의 불인도 원칙을 고수하는 국가들도 있다.
- ③ 인도 대상은 형사소추 대상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.
- ④ 인도된 범죄인 또는 피의자는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에 한하여 기소 및 처벌된다.

문 10. 국제사법법원(ICJ)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가만이 ICJ에 제기되는 쟁송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.
- ② 특정 분쟁에 대하여 ICJ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UN 안전보장이사회가 행한다.
- ③ ICJ는 전문성 원칙에 따라 국제기구는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만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.
- ④ ICJ의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.

문 11.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배타적경제수역(EEZ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연안국은 EEZ의 해저와 그 지하자원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한다.
- ② EEZ은 영해의 외측한계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을 말한다.
- ③ 내륙국은 연안국의 EEZ의 잉여생물자원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.
- ④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초(rocks)는 EEZ를 가질 수 없다.

문 12. UN 사무총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다.
- ②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은 UN 사무총장 선출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③ UN 사무총장은 최고행정책임자로서 총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직원을 임명한다.
- ④ UN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.

문 13.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이 아닌 것은?

- ① 사후주의
- ② 공동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
- ③ 오염자 비용부담
- ④ 지속가능한 개발

문 14. 조약 체결에 따른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데 전권위임장(full powers)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모두 고른 것은?

-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|
| ㄱ. 대통령 | ㄴ. 정부수반 |
| ㄷ. 특명전권대사 | ㄹ. 외무부장관 |
| ㅁ. 법무부장관 | |
- ① ㄱ, ㄷ
 - ② ㄷ, ㄹ
 - ③ ㄱ, ㄴ, ㄹ
 - ④ ㄱ, ㄴ, ㄷ, ㄹ, ㅁ

문 15. 1982년 UN해양법협약과 관련하여 그 숫자의 크기가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| | |
|---|--|
| ㄱ. 영해의 최대 폭 | |
| ㄴ. 접속수역의 영해기선으로부터의 외측 한계 | |
| ㄷ.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최대 거리
(단, 역사적 만은 제외) | |
| ㄹ. 군도수역에 있어서 직선군도기선의 최장 길이 | |
- ① ㄱ, ㄹ
 - ② ㄴ, ㄷ
 - ③ ㄷ, ㄹ
 - ④ ㄱ, ㄷ, ㄹ

문 16. 외교관 및 외교공관의 불가침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않는다.
- ② 외교공관이나 공관장 관저는 불가침의 대상으로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 공관이나 관저에 들어갈 수 없다.
- ③ Asylum사건에서 국제사법법원(ICJ)은 외교공관으로의 망명권(Diplomatic Asylum)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.
- ④ 접수국과 파견국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접수국은 외교공관, 재산 및 공문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.

문 17. X국 국민 갑(甲)이 Y국의 통화를 Z국의 영토 내에서 위조한 사건에 대하여 X, Y, Z 각국의 관할권 행사 근거를 옳게 연결한 것은?

X국	Y국	Z국
① 속인주의	보호주의	속지주의
② 속인주의	보편주의	수동적 속인주의
③ 속지주의	보호주의	속인주의
④ 수동적 속인주의	보편주의	속지주의

문 18. X국, Y국, Z국은 WTO 회원국이고, Y국과 Z국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였다. X국과 Y국은 각각 정부조달 설비자재 구매입찰의 참여를 자국 기업으로 제한하여 Z국 기업의 입찰 참여가 좌절되었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X국과 Y국 모두 정부조달협정위반이다.
- ② X국과 Y국 모두 GATT 제III조(내국민대우) 위반이다.
- ③ X국은 GATT 제III조 위반이 아니다.
- ④ Y국은 정부조달협정 위반이 아니다.

문 19. 공해에서 기국(旗國)관할권의 예외, 즉 공해 경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군함이 해적행위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타국의 사(私) 선박에 대하여 행하는 검문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.
- ②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정선명령을 할 당시 정선명령을 하는 선박은 영해나 접속 수역 안에 있어야 한다.
- ③ 선박 충돌로 인하여 가해선박 선장의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 형사절차는 그 선장의 국적국에 의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.
- ④ 연안국의 추적권(right of hot pursuit)은 추적당하는 선박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가면 소멸한다.

문 20. 국적국의 외교보호권 행사 원칙과 관련된 국제사법법원(ICJ)의 판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| |
|--|
| (가) 국적국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국적은 '기본적으로 소속된 사회적 사실로부터 오는 법적 유대감, 존재, 관심과 정서에 대한 진정한 관련성과 함께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와 의무'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. |
| (나) 국적국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'국내구제 절차의 사전완료(prior exhaustion of local remedies)'가 필요하다. |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(가) | (나) |
| ① 로터스호(Lotus) 사건 | 노테봄(Nottebohm) 사건 |
| ② 코르푸(Corfu)해협 사건 | 라그란드(LaGrand) 사건 |
| ③ 노테봄(Nottebohm) 사건 | 라그란드(LaGrand) 사건 |
| ④ 노테봄(Nottebohm) 사건 | 인터한델사(Interhandel) 사건 |